

이자 가계發 위기설 현실화 되나

폭탄

주택대출금리 6주연속 급등… 최고 금리 8.2% 올라

2억원 대출자 年이자 부담 한달 반새 100만원 불어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주 연속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에게 '이자 폭탄' 경보가 발령됐다.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어 내년 주택경기가 둔화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달 반새 최고 0.52%P 급등=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 주초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한 연 6.44~8.04%를 기록하며 우리·신한·기업은행에 이어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서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번 주초 금리를 지난 주 초에 비해 0.09%포인트 인상한 연 6.

7.9~8.19%로 고시했다. 지난달 12일에 비해서는 대출 최저 금리가 6주간 무려 0.52%포인트 급등했다.

농협은 지난주 초에 비해 0.06%포인트 오른 연 6.49~8.21%로 최고 금리가 8.2%대로 진입했고 연말까지 우대금리를 폐지한 우리은행은 0.06% 상승한 연 7.98~8.18%로 최저 금리가 8%대로 유행했다.

신한은행은 연 6.78~8.18%로 0.06%포인트 상승했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연 7.08~7.78%와 연 6.88~7.86%로 0.04%포인트씩 올랐다.

은행권의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한 저축은행과 기관은행은 연 6.44~8.04%를 기록하며 우리·신한·기업은행에 이어 최고 금리가 8%를 넘어서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번 주초 금리를 지난 주 초에 비해 0.09%포인트 인상한 연 6.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21일 현재 5.78%로 지난 달 12일 이후 0.43%포인트 급등하면서 2001년 5월30일 이후 6년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린 경우 그 이후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급등하면서 연간 이자 부담이 한 달 보름 전에 비해 100만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기계별 위기설도 부상=대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대출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

인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일 현재 176조7천39억원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1조1천750억원 급증했다. 이를 은행의 주택대출은 올 2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체와 CD 규모가 각각 50조원에 달하는데 예금 이탈로 은행의 자금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CD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 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인상

11월 이후 시장금리 급등에 속속 합류

저축은행들이 올 한 해 예금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대출 금리는 거의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이후 시장 금리가 급등하자 저축은행들도 서서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0.98%로 작년 말의 연 10.94%에 비해 0.0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 말까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연 4.86%에서 5.35%로 0.4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5.50%에서 연 6.54%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확대에 밀려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한 반면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을 불잡기 위해 예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야 했다"며 "저축은행들의 예대마진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저축은행들도 대출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와 함께 하는 여수 테마여행' 이벤트에 응모한 10가족이 엑스포 성공 기원을 위한 테마여행 출발에 앞서 23일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광주공장 제공)

금융당국 기구 개편론에 술렁

금감위원장 교체설 등 연쇄 인사 촉각

금융감독당국이 연쇄 인사와 기구 개편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은행장으로 옮기고 새 부위원장으로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용된 데 이어 조만간 1급 자리인 상임위원의 번동이 예상된다.

박대동 금감위 상임위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공모해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이 예보 사장으로 갈 경우 김용감 감독위원장과 윤영호 금융감독위원장의 교체 여부와 감독기구 개편 문제에 더욱 촉각을 고嘟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임직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김용감 감독위원장과 윤영호 금융감독위원장의 교체 여부와 감독기구 개편 문제에 더욱 촉각을 고嘟우고 있다.

개다가 금융당국 직원들은 현재 정부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 기구인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체제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공장 근처에도 장례시설 허용

복지부 입법 예고… 330만 m² 이상 신도시 화장·봉안시설 의무화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을 협오시설로 여겨 극심한 '님비현상'을 보이는 일반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장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정안'을 24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제곱미터(m²)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예상 화장수요를 고려해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 해당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과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입지제한 원칙을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 생활지역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 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립 모두 120cm(10cm×12cm)이하로 설치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지만, 수목장립은 산림경관 훼손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목장립의 표지는 산림보호와 경관유지를 고려해 나무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이달말까지 명의개서 하세요

12월 결산법인 주주명부 등재해야 배당금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에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31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토탈원·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주들은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해당 증권사가 알아서 명의개서를 처리해준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네오플랫(주)	[건설] 일반사무·생산·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946-2610
인포드림넷(주)	하나로탈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2/28	062-236-0217
㈜시스케이트	[광주]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42-383-6585
한이에세스(주)	한이에세스(주) 정규직 영업관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45-2101
㈜미비아오메드	광주영업소 약국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62-383-3245
우진엔지니어링	승강기설치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10-6254-2655
성진금형	통번역 및 비디어 통화 (영어/일본어 회화 가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55-3727
㈜디자인포유	CI/BI/편집디자인/포장디자인/AE, 카피라이터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62-385-9395
삼성 디지털프리자 금남로점	여경리 / 남여 판매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232-9191
㈜명서건설	철근전문건설회사 현장경우 및 현장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2-2633-8426
미아쿠폰	배달사원(지역기사 포함)을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0-3082-8871
초원문고	참고서 판매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1	062-574-7007
고려오토론	중국 상해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관리 및 수출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03	062-973-7771
㈜주주우기전	건축관련 유경험자 모집	대졸/경력3년	2600~2800	01/03	062-944-8204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產銀 민영화 금물살 탈 듯

이명박 당선자, 투자은행부문 분리대상 거론

대우조선·현대건설 매각도

17대 대선이 끝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 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강연회에서 "임기 중 20~30~30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그걸 갖고 중소기업 자금문제 하나만은 해결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국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떼어내 넘기고 꼭 필요한 정책금융 부분만 국책은행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이 가장 유력한 분리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업은행이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 주체권은행인 대우조선이나 대우증권의 우선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상된다.

대우증권 등 민영화 대상을 이 당선자의 언급대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매각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거리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3%는 일괄 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조속히 팔고 나머지 50%는 전략적 투자를 찾아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매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건설 등의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주체권은행인 대우조선이나 대우증권의 우선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상된다.

/연합뉴스

“R&D 투자지원 확대·규제 완화”

산업계 “차기 정부에 이것만은 꼭…” 요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 구호에 맞춰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각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골간이 세워질 정권 인수와 출범과 맞물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견의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분주하다.

전업계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학·정 협력 모델을 통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쟁에서의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